

민주당, 지선 기초비례 ‘당원 50%+상무위원 50%’ 반영

중앙위, 당현개정수정안 의결로 확정지어
광역비례 후보 5명 이상시 예비경선 가능
최고위원 보선 ‘중앙위원50+권리당원5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후보를 권리당원 50%와 시·도당 의결기구 구성원인 상무위원 50%로 선출한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뽑고,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한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

현 개정안을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597명 중 528명이 투표에 참여해 헌성 443명(83.9%), 반대 85명(16.1%)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단체 비례대표 후보를 기준에 추진했던 ‘권리당원 투표 100%’ 대신 권리당원 50%와 시·도당 의결기구 구성원인 상무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당현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오늘 민주당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주정당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위에는 앞서 지난 5일 부결됐던 지방선거 공천을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안건이 제부의됐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는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현·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부결됐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안건은 기초자치 단체 비례대표 후보를 기준에 추진했던 정 대표는 또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그려면 지방 선거를 승리해야 한다”며 “권리당원의 권리를 확대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히면서 중앙위원회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중앙위에서 투표 종료 시각을 기준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늦췄다.

이날 중앙위가 의결한 안건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식도 포함됐다.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후임을 뽑아 채우는 보궐선거이다.

선거일은 내년 1월 11일이며,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원 선거권 행사 시행 일은 올해 12월 1일로 설정됐으며, 임당 기준일은 지난 5월 31일이다. 또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투표 자격이 부여된다.

이날 현재까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의원은 모두 5명이다.

강득구 의원, 이성윤 의원, 문정복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이건태 의원이다.

보궐선거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이 치러진다. 예비경선에서는 투표권자 1명이 후보 2명을 선택하는 ‘2인 연기명’, 즉 복수투표제가 적용되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는다.

본경선 역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된다. 후보 등록은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개혁의 나루 점등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

사회대개혁위 출범…金총리 “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박석운 위원장 “대통령, 위원회에 힘 실어…이행 의지 담보돼”

시민사회·정부가 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모여 개

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소통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평가하며 “사회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를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

표는 “대통령으로 국무총리 자문기구를 만드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라며 “국무총리께서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구조화돼 있어 정부의 이행 의지도 담보된다”고 평가했다.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장을 맡았다. 이율리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동업 북한학원대 교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조영선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새봄 전 진보대학생 대표 등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

다수가 위원회에 포진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오인환 진보당 기획부총장, 천현우 사회민주당 자문위원, 오광영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 정당·정부 인사들도 참여

한다. 위원회는 향후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 시민에 대해 총리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특검 “윤, 반대파 제거·권력독점하려 계엄”

尹 취임 초기 ‘비상대권’ 언급

2023년 10월 군인사 기점 준비

국회 해산하려 부정선거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함이었고 최종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

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썩 쓸어버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이 같은 준비는 군 인사로 이어졌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국군방첩사령관, 육군지상작전사령관등 계엄 발생 시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군의 인사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됐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보직으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는 등 전횡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능 정지를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려 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249건의 내란·외한 관련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에 대한 처리를 원료했고, 미처처리된 나머지 34건의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인력을 재편하여 기소된 27명에 대한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다.

들었다.

‘명태군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 관련 리스크가 직접적인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하는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는 등 전횡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능 정지를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려 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249건의 내란·외한 관련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에 대한 처리를 원료했고, 미처처리된 나머지 34건의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인력을 재편하여 기소된 27명에 대한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다.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2년 연속 수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경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15일 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정책 전문성이 성실했을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민생 안정 등 핵심 현안에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정부로 인해 흔들린 경제의 기초를 바로잡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육성·재정 건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하는데 집중했다.

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지표에서

회복 흐름이 나타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효하게 활용해서는 전략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또 디지털 통화 폐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제 경제 흐름 속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도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기금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과제 점검 △미분양 및 주택 공급 정책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 미래 산업 육성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앞서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하는 2025 올해의 벤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